

“환율 10원 하락엔 車 매출 4200억·영업이익률 4%p 감소”

(원·달러)

비온드 스톰

④ 환율전쟁과 한국경제

#. 경기도에 동지를 든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요즘 미국 관련 뉴스에 자꾸 눈이 간다. 환율 걱정 때문이다. 이 회사의 영업담당 부사장은 “떨어지는 달러값을 보면 피가 마른다. 문제는 환율이 하루에도 최대 두자릿수까지 널뛰다 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추야 할 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트럼프가 ‘이웃 나라 지지 만들기(Beggar-My-Neighbour) 정책’을 꺼내 들까. 시장에서는 무역전쟁의 한 카드가 될 것으로 해석한다. 무역전쟁과 통화전쟁은 때려야 뗄 수 없어서다.

지난 1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약한 달러는 우리에게 무역과 기회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좋다. 장기적으로 달러의 힘은 미국 경제의 힘을 반영하고, 달러는 주요 준비통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며 통화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달러를 앞세워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전문가들은 “유로존과 일본 중앙은행은 이미 긴축 선회에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며 포스트 통화 전쟁을 우려한다.

◆통화전쟁 이미 시작·韓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도

시계를 1987년으로 돌려보자. 상상만 해도 끔찍한 환율 대란이 터졌던 시기다. 당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자 원화는 급격하게 절상돼 1987년 원·달러 환율은 연 평균 792.30원에서 2년후 679.60원으로 14% 하락(원화값 상승)한다. 저가에 의존하던

지속적인 원화강세에 대비해 장기적인 환리스크 전략 필요 기업 재무리스크 초래될 수도

수출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게 돼 1988년 141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는 1989년 3분의1 수준인 50억달러로 줄었다. 이 기간 대미무역도 약 30% 감소했다.

올해 수출기업의 가장 민감한 문제도 환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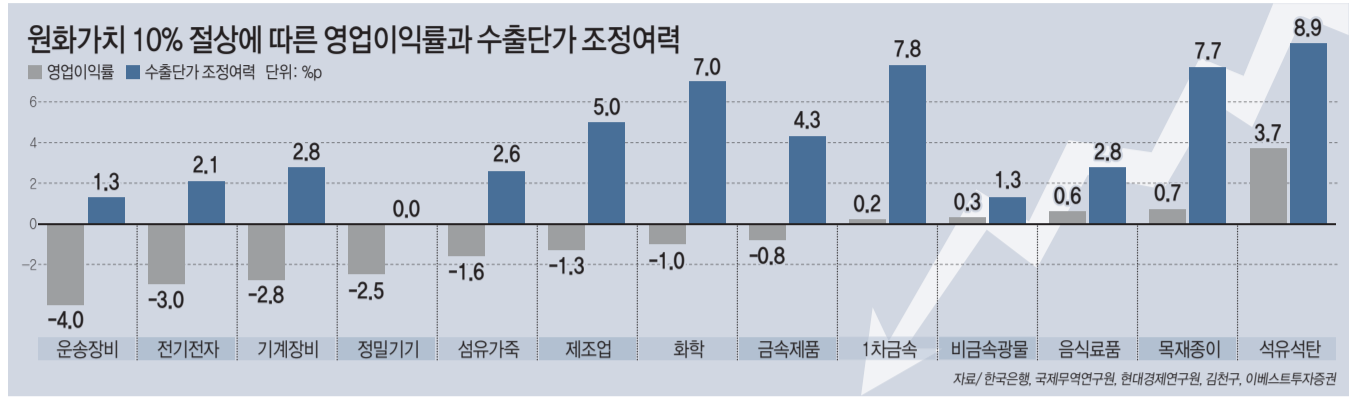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기업 5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슈로 ‘환율 변동 심화’(48.4%)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글로벌 경쟁 심화’(25.1%), ‘미국·중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강화’(16.0%) 등이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보통 환율이 10% 하락하면 운송장비업의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전기전자산업은 3%포인트, 기계장비는 2.8%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김건우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 장기적인 환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업들은 자체 환율 전문가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응답 기업의 67.9%는 이미 환차손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우일까.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다. 과



거와 달리 한국경제의 체질이 좋아졌고, 산업 경쟁력도 강화됐다는데 근거한다.

하지만 미국이 올해 우리나라에 대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미국 정부는 ①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 이상 ②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③중앙은행 외환순매입액 2% 이상 등을 동시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작년 10월 ①·②번에 해당해 환율조작국보다 한 단계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2017년 대미 무역흑자가 179억7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첫번째 요건에서는 벗어났다. 하지만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국가로 의심받게 된다면 상황은 겉잡기 힘들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내놓는다.

◆금리인상은 또다른 환율 압박카드

미국은 금리인상에도 자신감을 갖는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신임 의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후 첫 번째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경제지표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Fed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상승하고 있다”며 “기준금리의 점진적인 인상이 목표 달성에 최선이라는 자신감을 준다”고 말했다.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탈동조화 양상을 보인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심리의 유지, 미국 재정확장에 따른 적자 심화 가능성 등과 함께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노선 등에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초부터 미국산 제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 달러 옹호 발언을 해 왔다.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디플레이션을 걱정한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셔(계량경제학의 창시자)는 1933년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개념을 통해 장기 경기 사일에서 부채와 물가를 가장 경계해야 할 변수로 꼽았다. ‘호황 국면이 끝난 후 부채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자산 가격 하락과 유동성 위축 등이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으로 퍼진다’는 것.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나 기업 모두 빚을 내고 싶어도 늘리기 어려운 처지

에 내몰릴 수 있고, 이는 한국경제에 충격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원화값 강세로 누릴 빛 부담 감소가 새로운 부채 리스크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와 정부,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006년 183%에서 2016년 232%로 4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의 부채 비율 평균은 210%에서 235%까지 2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들이 걱정하는 것은 ‘금리 상승→자금조달 위축(부채절벽)→투자감소→경쟁력 약화→재무리스크(부채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터라 기업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긴축 선회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리인상은 수출에도 부담이 된다. 원화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한국무역협회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기업 채무 상황부담을 증가시키고, 원화 절상을 가속할 수 있다”며 “자칫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韓·美 세이프가드 양자협의 사실상 결렬... WTO 제소 수순

미국, 세이프가드 보상·철회 거부 정부 “제소 요건 충족... 보복 추진”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끝내 수용하지 않자 정부의 미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량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이 지난 4월로 4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포고문은 대통령의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지난 1월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김현중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수정 및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발표가 없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치(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수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정부는 양자협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치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협은 사실상 끝났다”면서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

건은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철강 관세 등 미국의 신 보호무역주의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자 정부가 대미 통상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관료 조직의 경우 문호가 개방된 미국과 달리 고시 출신 중심으로 돌아가고, 인사 제도가 경직돼 민간 영역의 다양한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기업도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통상 전문 인력을 키우고 통상문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투자나 수급 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상 역량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힘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통상문제가 불거지고 나서야 통상 조직을 보강하는 기존 모습에서 탈피해 정부와 기업이 평소 미국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미리 대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산업은행, 이번주 한국GM 실사 착수... 부실 원인 규명되나

산업은행이 이번주부터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시작함에 따라 한국GM의 부실 원인이 규명될 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 문 사장은 지난 9일 만나 한국GM의 실사

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실사에서 한국GM의 원가구조를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국GM의 회생 가능성이 원가구조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구체적으로 이전가격, 본

사 대출의 고금리, 본사 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5대 원가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GM 본사의 자구계획안이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다. 지원은 신규 자금 투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GM은 이달 초 산업은행에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GM에 빌려준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를 출자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대신 신차 출시나 생산에 필요한 28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산업은행도 한국GM이 자구계획에 따

라 회생 가능성이 보이면 지분율 17% 만큼(약 5000억원) 신규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서로간 입장 차이를 좁혀가면서 실사를 하기로 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